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22년 5월 16일(월)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연구원** ·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 이동주의원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 취지·목적

- 차기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모색 및 국정과제 평가

■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민주연구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의원실

■ 진행 순서

- 축하
 -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학영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 원장)
 -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및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

- 좌장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

- 발제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위평량 소장(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 토론

-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
-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호준 한국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위원장
- 이승훈 해우소포럼 회장
- 정의경 중기부 손실보상과 과장



Contents

■ 축 사

윤 호 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 홍 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
이 학 영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3

■ 인사말

노 용 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 원장)	5
서 영 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및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7
이 동 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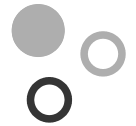
■ 발제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1
- 위 평 량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	

■ 토론문

토론 1	25
- 민 병 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토론 2 코로나 위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29
- 김 남 주 참여연대 변호사	
토론 3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37
- 박 충 렬 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 4 자영업자가 바라본 국정과제 진단 및 자영업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언	45
- 이 호 준 한국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위원장	
토론 5	53
- 이 승 훈 해우소포럼 회장	
토론 6	57
- 정 의 경 중기부 손실보상과 과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동주 의원님과 민주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두웠던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중한 일상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남은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피해를 감수하며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자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고, 코로나 이후 7차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피해를 온전히 채워드리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며, 공약 파기 정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반발과 민주당 등의 지적으로 뒤늦게라도 정부는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셨을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과거 손실에 대한 보전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아픔을 외면한 사실상 약속 파기 행위입니다.

국회 추경 검토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급적용, 맞춤형 금융지원까지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신속한 추경 협상과 손실보상을 반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고정비채무감면법(한국형 PPP법)」 제정과 소급적용까지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한 법제 보완을 노력해 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에 참여해주신 민병덕 의원님과 전문가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자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확실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홍 근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환영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됐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일상 복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지난 피해 규모와 극복을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완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동주의원님과 민주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닥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의 선도국가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방역 정책에 모범이 되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와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의 제약과 인원제한 역시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경영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는 무거운 결정이었겠지요.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완전한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과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파기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번복하는 등 불안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감수했던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여러분이 온전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정비채무감면법'의 도입 등 추경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해주신 전문가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 다함께 안온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 학 영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며, 첫 번째
국정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협조하고,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의하는 것 역시
민주당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정과제 또한 같이 평가하는 귀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 발제를 맡아주신 위평량 소장,
토론을 맡아주신 민병덕 국회의원,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호준 한국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위원장, 이승훈 해우소포럼 회장, 정의경 중기부
손실보상과 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6.

국회의원(민주연구원 원장) 노 응 래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오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민주연구원과 소상공인정책포럼, 이동주 의원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과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속 의원님,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이학영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특별히 패널로 참석하시는 민병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으신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발제를 하시는 위평량 소장님, 패널로 참석하신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님,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님, 이호준 한국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위원장님, 이승훈 해우소포럼 회장님, 정의경 중기부 손실보상과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매출로 인해 수익은 줄어들고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출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채무나 이자에 대한 부담도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으나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침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씩 네 차례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이분들의 상황이 나빠지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 때 우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업훈련을 포함한 재취업·재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으로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손실보상 제도를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해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입법,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2. 5. 16.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및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 영 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 민생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은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2019년 말 684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빚 폭탄’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12일 추경안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공언한 예산 50조 원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꼼수’만 가득했습니다.

‘과학적 손실 추계’라는 이름으로 손실보상 예산에 54조 원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농치려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논의했다던 ‘배드뱅크’는 백지화되었으며, 대선 기간 야심 차게 발표한 ‘한국형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 ‘임대료 나눔제’는 새 정부 100일 로드맵, 국정과제 그리고 추경까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출범하자마자 민생을 내팽개치고 공약을 파기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존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손실 보상금과 방역지원금, 맞춤형 지원정책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이자, 일상 회복을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에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 입법과 예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저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6.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 이 동 주

발제 1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위평량 소장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위평량 소장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I. 논의 시작과 배경

1.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 약속 논란

-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자들은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의 최소화,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충분한 손실보상과 민생회복 등 미래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

1) 20대 대선 ‘국민의 힘’의 소상공자영업자 공약(2021.9.15)

7가지 약속

1.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구조본)’ 설치
2.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3. 폐업(위기) 자영업자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4.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지원금과 디지털치료제 지원
5. 3대(세금·공과금·임대료) 비용경감과 매출확대 지원
6. 과학기반 거리두기 도입과 방역친화적 설비지원
7.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 민관합동 특별기금 조성

〈개요〉 Rescue 2022: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

1.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
2.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지원(50조원)
 -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과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3.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75%)을 소액의 경우 90%까지 확대
 - 과중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
 - 교육·훈련 우수자는 재창업(현행 30억) 50% 추가 지원
 -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등 비용 500만원 지원
 - 교육·훈련(paid training) 참가자(현행 2,000명)를 10만명으로 늘리고 훈련기간 중 1인당 600만원(월100만원×6개월) 지급+600만원 생계대출
4. 희망지원금 확대지급(최대 43조원)과 디지털 치료제 지원
 - 최대 43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최대 5,000만원 지급
 - 심리상담과 대화봇 등 디지털 건강 모니터링 병행
5. 3대 비용 경감 & 매출 확대 지원 (세금·공과금·임대료)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100%) 세액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현행 1%) 한시적으로 5%로 확대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영업 행위 규제 강화 & 공정 수수료 체계 정립
6. 과학적 거리두기 도입
 - ‘전담 위원회’ 구성, 과학기반 입장인원 조정, 방역친화적 설비지원
7. 팬데믹 극복 특별기금 조성
 - 민관 합동 기금 연간 5조원 조성: 피해보상과 감염병 예방활동에 사용

2) 소상공자영업자 공약과 관련된 윤 당선인의 발언¹⁾

○ 코로나19 대응체계개편

- 취임을 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 할 것 (2021.11.7, 연합뉴스 인터뷰)

○ 코로나19 손실보상현실화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봤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 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2022.2.21, TV토론회)
-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 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2022.2.26, 페이스북)

○ 임대료

-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 (2022.1.11, 신년기자회견)

1) 법무법인 율촌, 윤석열당선인 공약의미

3) 대통령직인수위 손실보상책(4.28)

- 손실보상²⁾은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함.” 즉 소급적용 없음을 의미
- 총 피해규모 약 54조원 추산, 대상사업체 551만(소상공인·소기업)
 - 2년(2020~2021년) 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 규모,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 차등 지원
 - 여행업·공연업 등도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중기업 매출액 10억원~30억원 포함, 기재부발표 5.11)
 - 손실보상제도 보완: 손실보상금 보정률 현재 90%를 100%로, 하한액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기재부발표 5.11)

4) 다수 소상공자영업자들의 인식 vs. 국민의 힘 공약과 후보자 발언

- ① 손실보상 소급적용논란 : 4.28일 인수위 발표. 현행제도 활용 최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하려면 현행 법률개정 추진해야 함
 - 2021 7월 7일, 손실보상제도 통과³⁾로 결국은 법적으로 소급적용 불가확인 후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18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에서, “국민의 힘은 최근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이 의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언한 것임
- ② 후보자 시절 1000만원 지급 발언 : 인수위 입장은 피해자별로 차등지급하겠고, 당시 발언은 일괄지급의미가 아님을 강조
 - ‘기존 정부 안’은 사업자별 업종별 피해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 사업자로 지정된 320만 사업자에 ‘방역지원금’⁴⁾명목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약3.2조원), 2022년 추경편성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지급(약 10조원)지급 중으로,

2) 문재인 정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누적 1843만 개사에 총 31조6000억 원을 지급함.

3)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4 마련

4) 2021년 7월7일 이후 손실보상제도에 의한 손실보상금지급과 함께 ‘방역지원금’명칭으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식

즉 기존 400만원은 피해자에게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차등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이었음
 - 당시 후보자는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충분한 손실보상으로서 600만원을 더 해 총 1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점에서 소상공자영업자들은 일괄지급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5) 온전한 손실방안

- ① 법 개정을 통한 소급적용 필요(현행법 유지 시 고통분담 명분 속에 방역지원금과 같이 충분한 지원)
- ② 개인사업자별(업종, 품목, 지역 특수성감안) 정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통계
- ③ 개인사업자별 시기별 기간별 고용자 유무 데이터
- ④ 현행손실보상제도 개선(보정률 변경, 하한액 변경 등); 사업자피해액=2019년 대비 2021년 동기간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대비 2019년 인건비와 임차료비율)×보정률(100%)
- ⑤ 현행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대상 업종은 협소, 따라서 이용인원 제한, 시설이용제한, 사적모임제한 대상 업종 포함과 함께, 공공의 안녕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모든 업종 포함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
- ⑥ 사업체근로자(정규직과 비정규직=고용보험미가입자 중심)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 마련 필요(기간별)

6) 기재부의 2022년 59조원 추경예산안(5.11)

- ① ❶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❷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❸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❹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❺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 추경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
- ② 온전한 손실보상 : 손실보전금지급. 약23조원, 600만원~1000만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약 370만개업소, 매출액40%이상 감소한 여행,항공운수,공연전시 등 50개 업종 추가

II. 소상공자영업자영역 지원전략과 정책

- 코로나19 팬데믹은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2022년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가볍게 넘겨서는 아닐 될 것이며,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른 면밀하고 충분한 분석을 통해 사전 준비에 집중해야 함

1. 더불어 민주당의 역할

- 1) 소상공자영업생태계전환을 감안한 대한민국경제구조의 전환을 염두에 둔 전략과 정책마련에 집중해야 함
- 2) 지난 대선에서 강조한 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와 합의를 통해 여야 공약의 대부분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함
- 3)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각 당에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속에 조속한 법제화필요 함
 - ① 우원식외 21(2021.10.5.),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즉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구축을 위한 법으로서 고용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인건비, 상가건물 임대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납부에 활용한 경우 대출원금 상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② 김성환외 25(2021.12.9), 현행 손실보상 대상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 인원제한 등의 조치 추가하여(안 제12조의2제1항),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제도 보완
 -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적 모임 제한·금지 조치 등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은 제외되어 있어 손실보상의 형평성확보
 - ③ 김성환외 167(2021.12.22) 선지원 후정산 원칙 정착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마련
 - ④ 박홍근외 9(2022.3.24) 공약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임대료 분담위한 개선안, 즉 임대인이 최대 70%에 이르는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 감면한 금액의 절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집합제한업종 기준 임차인 50, 정부 25, 임대인 25) 임차인과 임대인, 중앙·지방정부의 상생과 임대료

- 분담제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안 제12조의8 신설).
- ⑤ 진성준외 87인(2022.1.3.) 결의안, 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제출토록 촉구
- ☞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현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지원

2. 대선시기 소상공자영업 영역에 대한 대국민 약속 실천⁵⁾

1) 정부지원정책의 기조 대전환 강조

- ① ‘사후가 아닌 사전’, 충분한 사전지원과 사후정산을 통해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제적소 지원을 원칙
- ②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전환
- ③ ‘보상의 사각지대 없도록 함’,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도록 함

2) ‘을’乙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겠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수수료, 광고료, 부가서비스,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 여전히 변치 않고 있음.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
-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 억제
-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 강화하겠음. 즉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며,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하겠음
- 데이터 독점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기업의 데이터의 사적활용금지 또는 오픈활용,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하는 것을 방지, 시장 독과점 방지할 것임

5)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약. 2021년 9월, 2021년12월15일, 2021년12월20일 발표공약을 정리하였으며, 여기에는 공정시장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을기본권본부 등에서 강조한 공약을 종합함

- 각 지방정부에 특화된 소비자 혜택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상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하는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음.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음
-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
- 가맹점·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는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제구축,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제 구축

3) 코로나 팬데믹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자영업자 지켜내겠음

-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보상.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앴
-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조기에 도입하겠음. 즉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
- 폐업을 선택하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하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위기를 완화하는 획기적 금융정책 시행, 즉 금융지원 보다는 국가의 재정직접 지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음
- 부채에 대한 특별조치,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음.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할 것임.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함
-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 완화함. 즉,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강화 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
-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

4)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

- 재난시점에서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
-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
- 착한임대인 운동의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고 임대료 감액청구권 제도와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즉,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법원에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어 분담하는 시스템 구축
-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만들고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해 외국과 같은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함

5) 지역화폐 발행을 더 확대

-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 2조 3천억 원, 2020년 9조 원, 2021년 수요조사(행정안전부) 결과는 26조 원 규모, 기재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와 효과를 무시하고 발행금액 축소했으나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30조원 발행하는 것으로 함.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

6)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전환. 예컨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

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

-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

7)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열겠음

-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
- 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
-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

8) 소상공자영업자 사회복지체계 강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제도적 이유를 찾아 해결하고 가입을 적극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

9)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등

-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이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뒷전, 따라서 전담차관 신설
-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10)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편의 증진 위해 플랫폼시장 새판짜기

첫째, 플랫폼에 맞는 자율규제와 합리적 사후규제 중심 규제체계 마련

- 플랫폼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
- 서비스별로 경쟁상황에 따라 규제대상 합리적 선정, 자율규제와 맞춤형 사후규제

둘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이용규칙을 확립, 이용자 편익 향상

- 투명한 공시제도 등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한 플랫폼 거래규칙 확립
 - 기업비밀 유지범위 내에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 이용사업자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플랫폼 운용규칙 확립
 -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조작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차단
 - 플랫폼 업체의 이해충돌 상황 관련 정보 명확하게 공개, 책임과 의무 강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접근권, 이전자유권 등)강화, 데이터 유출 등 엄벌

셋째, 독과점행위 차단 위해, 상시감시시스템 마련, 신속강력 제재로 시장보호

- 플랫폼 시장 전담 감시 및 평가 기구 설치
- 매우 예외적인 독과점 시장에 대해서 ‘시장보호 및 회복 위한 조치권’ 마련
 - 시장 경쟁 유지 위해 신규 플랫폼의 진입 촉진, 데이터 호환성과 이동성 보장,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한 제3자에게 익명정보 및 집계정보(aggregate data) 개방의무화
 - 해당 시장의 독점기업과 관련한 인수합병 심사 강화로 문어발식 확장 차단
-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 발생 최소화 위해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화강화

3. 중장기적 지원원칙

- 경제와 산업의 생태계변화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획기적인 추세전환 또는 발전의 경로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정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자영업자비중이 약 24%로 상위수준에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대응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첫째, 위기적 상황과 일상에서 달리 구사할 전략 및 정책 마련해야 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봐야 함. 특히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매몰된 금융지원(사업자채무부담 증가) 대책 보다는 재정직접지원 정책 강화
 - 코로나19 대응규모 국제비교 (IMF, 21.10월, 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개국 유동성지원 규모는 평균 GDP대비 9.5%, 재정지원(재정지출+세제감면)은 9.8%수준인 가운데 한국은 유동성지원 10.1%와 재정지원 6.4%로서 낮음
 - 2022년 4월20일, 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2년 52%(55.1%=2021.10 추정), 2026년 58.3%(2021.10추정=66.7%) 및 2027년 59.8%로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초기 재정건전성 추정오류
- 둘째, 그간의 현금성지원보다는 채무부담을 최소화 하는 지원대책 필요, 부채경감 등으로 사업자의 신용도 유지와 특히 인플레이션 악영향 최소화(구매력하락, 자산양극화 심화 등)
 - 세계 최고수준이며 한국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소비지출 유지, 경기회복 시기에서의 사업자 투자 활성화 등 잠재성장능력의 확보와 같은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더 필요
 - 무디스는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과 그 규모는 2021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와 세계 최고수준, 한국은행 기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가계부채(신용+대출+판매) 1862.1조원으로 증가
 - 경제충격과 위기 시 단기적 금융지원(대출과 보증 등) 필요하지만 과도한 금융지원정책은 당장의 어려움을 미래로 넘겨버리는 수단으로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토론 1

토론문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토론문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memo

memo

토론 2

코로나 위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

코로나 위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김남주 참여연대 변호사

□ 소상공인의 고통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정부의 부채는 비교적 안정적임.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규모는 주요 10개국 중 가장 낮으며, 특히 직접지원비율도 가장 낮음.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1. 3분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큰 폭 증가하였음. 2021년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87.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

□ 윤석열 정부, 온전한 손실보상 변질

-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하여 선거 당시 공약을 번복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음.
- 법적 성격이 손실보상이 아니며,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달라. 문재인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면했던 행태와 본질적으로 같음.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언

- 위헌성 시정 위해 손실보상 소급 지급(법 개정 사항)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시 부칙 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시 적용 범위 명시
- 보상대상자 확대
감염병예방법 개정 : 보상 대상자를 소상공인에서 행정명령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他 손실보상과 같이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 통합(동법 개정)
- 감염병예방조치로 인한 他 손실보상은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 유독 집합제
한에 관한 손실보상만 소상공인법에 규정

감염병예방법 70조1항1호, 4호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집합제한을 규정한 49조1항2호는 보상대상 손실에 미포함

○ 피해인정률 개념 폐지

피해인정률은 법정 개념 아닌, 보상심의위가 심의한 증기부장관의 고시에 불과. 보상 100% 완전한 보상하고, 행정으로 보상을 인하 못하도록 법률에 “정당한 보상” 명시(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구와 같음. 완전한 보상을 의미)

□ 신속·충분한 피해지원

○ 감염병예방 조치로 인한 지원 체계의 구조

- 2원적 체제(손실보상/피해지원) : 손실보상,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실에 대하여, 피해 지원, 행정처분으로 입은 손실이 아니지만 위험으로부터 입은 피해 지원
- 감염병예방법은 손실보상 이외에 사회연대의 원리와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감염환자에 대한 생활지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피해지원 규정은 다른 위험 대응 법체계도 유사(가축전염병예방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 충분하고 합리적인 피해지원

- 엔데믹 시기 소요 재정량 추산 불확실성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재정 적자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으므로 과감한 피해지원 필요. 코로나 초중기 상황에서 투입 재정 예측 곤란했던 점은 정부 여당의 애로점이었던 것은 공감
- 코로나 위기로 입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성(자영업자 부채 증가량 등 피해 다각적 추산 필요), 코로나 집합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 매출액이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성 있는 피해지원을 해야 함.
- 간접피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공감

□ 포스트코로나 대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이후 지속적인 피해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반감 조성 여론 등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지원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점 고려
- 현금성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을 증가, 비용을 감소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추진
- 지역화폐 발행 확대
- 채무조정/금융지원

□ 채무부담 완화 및 폐업지원

- 금융복지센터 확대 설치, 설립 법적 근거 마련(금융소비자보호법) :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정리, 일자리 연계, 긴급복지 지원을 통합 서비스 제공, 광역 지자체에 설치 의무 부과
-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속 마련
 - 만기연장·상환유예 :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곧바로 경영이 개선될 수 없으므로, 유예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엔데믹(2급 감염병 지정시) 이후 일정한 경기 정상화 기간까지, 약 1년간, 2023. 4.말까지 만기연장 조치는 유지되어야 하고, 그 후 일시적 자금 경색된 자영업자 등을 우량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조치 등을 실시
 - 채무조정 : 희망모아 방식의 채무조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 채권의 금액 상한(국민행복기금 1억원 상한)을 높이고, 사회적 재난과 정부의 방역 조치의 피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환 면제 비율(국민행복기금 일반채무자 20~70% 면제, 특수채무자 70~90%)을 높여야¹⁾ 하며, 엔데믹 이후 정상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국민행복기금 최장 10년)을 장기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캠프가 운영하는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다만 운용기관을 캠프로 할 것인지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진흥재단과 같은 기관으로 지정할지 논의 필요.

1) 국민행복기금 특수채무자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70%를 감면,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는 이 비율 또는 그 이상 감면 필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재난피해사실확인서(해당 지자체)

70%

- 법원 채무정리 절차 개선 : 아래 추가 설명
- 폐업지원 : 소상공인 폐업에 대한 지식과 전략 부족. 폐업은 다양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시설과 자재를 처분하는 행위로서 매우 복잡하고 전략이 필요함. 하지만, 무질서한 폐업으로 손해가 확대될 위험 있음. 이에 △폐업상담(중기부가 접근 편의성 제고 위해 은행, 세무서, 지자체에 폐업지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법률, 금융, 세무 등 전문가 배치하여 상담, 상담자를 폐업지원 프로그램 우대), △전문 폐업 컨설턴트 양성, △폐업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금융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세무서 등)

□ 도산절차 개선

- 도산 전담법원 확대 설치 : 서울회생법원 既 설치→고등법원 소재지로 확대
- 도산 전담법원 관할 확대 : 고등법원 관할 내 보통재판적-주소-있는 사람은 위에 언급한 도산 전담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확대
-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現 3년→2년
- 연체 신용정보 삭제(신용 대사전) : 코로나19 시기 연체 정보는 모두 삭제, 채무조정, 도산 절차 관련 정보 삭제 기간 단축⇨신용정보원 사내 규정 개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 절차 : 캠프와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은 협약을 통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 신속 간이 프로그램을 마련
- 법원 재판 실무 개선 : 개인파산 원칙적 절차로 운용 필요. 채무 상환 능력 부존재를 엄격하게 증명하는 방식도 지양 필요.

□ 새로운 감염병 창궐에 대비한 제도 개선

- 코로나 대응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 입법을 했으나 한국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파편적 입법이 됨
- 특히 손실보상 제도화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회, 여와 야의 협치 부족으로 제도화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 이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거나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대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 △집합제한 명령 요건 및 발령 기준 및 원칙 마련, 영업금지 근거 신설(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 대상 비상공인으로 확대(감염병예방법) △피해지원 제도 정비 △임대료분담제도 △재난 긴급 명령권 도입** △한국형 PPP

*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근거. 이 규정은 지극히 추상적으로서 법률 규정만으로는 명령의 대상자, 명령의 내용을 국민들이 예측하기 어렵고, 발령 기준에 논란이 있으며, 집합제한 규정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없다는 위헌론도 있으므로, 차제에 정비가 필요함. 일본 신종인플루엔자특별법은 영업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감염병 상황 이외의 재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에 입법하되, 그 법의 체계에 맞게 구조화 하여야 함. 임대료분담제와 같은 위기 대응 제도는 개별 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재난안전법으로 일원화 필요(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 6개월 연체 불이익 유예 제도 등도 마찬가지)

토론 3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

미국 급여보장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

1. 1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하 'PPP')

- ☐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27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2조 달러(미국 GDP의 약 11%, 2020년 미국 예산의 1/2)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PP 신설, 실업급여 확대, 현금지원(Economic Impact Payment) 등의 정책이 포함됨
- ☐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은 2020년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인 PPP를 시행하였는데, SBA가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 기업은 1천만 달러(약 129억 원)¹⁾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
- ☐ PPP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출 후 8주 안에 정부가 정한 상환면제 대상 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 함

1) 2022년 5월 12일 기준 환율

- 상환면제 대상 비용은 급여성 비용과 비급여성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급여, 유급휴가비를 비롯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비급여성 상환면제 비용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 요금과 같은 유틸리티 비용, 운영비 등을 말함
 -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전체 상환면제 금액에서 급여성 비용에 사용한 금액의 비중이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예컨대 대출금 12만 달러 중에서 10만 달러를 상환면제 대상 비용에 사용했지만 그중 6만 달러만 급여성 비용으로 사용하고 4만 달러를 비급여성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급여성 비용 6만 달러에 비급여성 비용의 일부인 2만 달러를 합한 8만 달러($6만 달러 \div 0.75$)만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 잔액은 1%의 이자율로 2년 안에 상환해야 하며, 고용노동자 수가 감소했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함
- 미국 의회는 2020년 7월 4일 「급여보장유연화법(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을 제정하여 PPP 신청기한을 2020년 8월 8일까지 연장하고, 대출금 사용기한을 대출 후 8주에서 24주로 연장함
- 이와 함께 급여성 상환면제 대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의 비중도 75%에서 60%로 축소함
 - 6만 달러를 급여성 비용으로 지급하고, 4만 달러를 비급여성 비용으로 지급한 때도 10만 달러($6만 달러 \div 0.6$) 모두 상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임
 -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의 만기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2차 PPP

- 미국 의회가 2020년 12월 제정한 「2021년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2차 PPP를 시행하고 있는데, 2차 PPP는 1차 대출(first draw)과 2차 대출(second draw)로 구성되어 있음
- 1차 대출은 1차 PPP와 같은 조건으로, 2020년 8월 8일까지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1차 PPP나 2차 PPP의 1차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면제 대상 비용으로 사용하여 상환을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을 예정인 기업은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1차 PPP보다 강화되었는데, 고용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특정 분기의 총수입액이 2019년 같은 분기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1차 PPP 운영 초기에 고용노동자 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 은행을 통해 PPP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자금이 일찍 소진되어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기업이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2차 PPP에서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건을 이처럼 강화한 것임

-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급여총액의 2.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 한도도 1천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약 25억 7,700만 원)로 줄었음

○ 다만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에 종사하는 기업은 3.5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 SBA는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Community Financial Institutions: CFIs)을 지정하고,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PPP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자 수가 적은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임

- SBA는 2월 24일부터 2주 동안 고용노동자 수가 20명 미만인 기업의 PPP 대출 신청만 받고,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대출금 산정 기준도 순이익의 2.5배에서 총이익의 2.5배로 상향 조정함

- 2021년 3월 제정된 「2021년 PPP 연장법(PPP Extension Act for 2021)」에 따라 2차 PPP 신청기한을 2021년 3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함

○ 이후 PPP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음

-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 8천 건이고,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1,018조 원)에 달함

○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면제가 승인되었으며,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74조 원)로 대출 총액의 85.9%를 차지함

3. 시사점

- 국회는 2021년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10월 8일에 의결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을 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
- 손실보상 금액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하여 도출함
 -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보정률 80%를 곱하여 최종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는데,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피해와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함
 -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상한은 1억 원, 하한은 10만 원으로 정함
 - 2022년 2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면서 이 보정률을 90%로 확대하고, 하한도 50만 원으로 증액함
- 2022년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와 함께 마련한 손실보상 선지급 방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 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음
 - 500만 원(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데,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선지급금을 지급함
 -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사후에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반대로 선지급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2년 거치 후 1% 금리로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함

- PPP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은 대상, 금액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있어서 서로 다름
 -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는 것만 다를 뿐 손실보상 대상이나 금액 산정방식은 이전과 같음
 - 선지급액이 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곧바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선지급 방식이 미국의 PPP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PPP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 이상 감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모두 PPP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2022년 2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면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함
- 2022년 1월에 매출액 감소 사업체에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9.6조 원을 편성하긴 했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 대상 사업체만을 지원함
-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손실보상금은 기업이 그 사용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PPP 대출금은 인건비를 비롯한 정해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만 상환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손실보상금 산정 시 영업이익률을 고려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

이지만, 인건비와 임차료의 80%(2021년 4분기는 90%)만 보상하고 다른 비용은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큼

□ 마지막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PPP처럼 대출 후 상환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체별로 인건비, 임차료를 포함한 비용의 분포가 넓으므로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대상 기간이 지난 후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방식은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PPP처럼,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조건에 맞게 사용한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토론 4

자영업자가 바라본 국정과제 진단 및 자영업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언

이호준

한국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위원장



자영업자가 바라본 국정과제 진단 및 자영업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언

이호준 한국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위원장

○ 양상해진 국정과제와 선거 공약과의 불일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주요내용〉

1.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 (채무조정, 금융지원) 담배, 보증대충,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3. (경영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재도전 과정 패 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 업종전환 촉진
4. (경쟁력 재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5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6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 지난 대선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 많은 공약이 나왔고 특히 재정자금을 확보에 대해서 50조, 100조 등 경쟁하듯 대책 발표. 그러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고 최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크하게 됨.
-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려면 소급적용 필요. 인원제한, 시간제한에 대한 피해 입증 필요. 직접 피해 업종 뿐 아니라 간접적 피해업체까지 지원필요.
- 가장 중요한, 그리고 분명히 하기로 했던 ‘소급적용’이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피해지원만 하는 것은 기존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코로나19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총규모는 120조. 2019년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은 684조 9천억원에서 2021년 말 909조 2천억원으로 2년 동안 224조 3천억원이 늘어남.
- 이동주의원실이 2021년 1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산출한 2020년 한해 동안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는 44조원에 달함.
- 늘어난 빚의 규모만 보더라도 과연 손실액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해 도출한 것인지 의문.
- 상가임대차 반값 임대료 대책 또한 빠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피해지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은 또 임대료로 나갈 것.
- 한국형ppp(임대료 상환 감면 대출프로그램) 및 임대료 나눔제(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1/3씩 부담)에 대한 선거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실종.
-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부분도 사라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9조를 넘긴 상황에서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대책이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손실보상(보전금)으로 끝나지 않아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또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올 하반기에 다시 유행될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함.
- 지난 2년간에 대한 보복소비와 비대면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남.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로의 집중.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이 형성되었고 이 독과점을 기반으로 플랫폼들이 변종영업을 하게 됨. 이런 상황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이 절실함.
-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 계층이 우리 사회의 최고 취약계층인 것이 확인됨.
-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역시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약자 등으로 사회취약층임.
-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 사회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함. 이에 소상공

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기조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함.

○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제언

1.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며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만으로는 한계에 도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함.

- ▶ 광역단체 및 지자체 공정경제 전담부서 신설 및 확대를 통한 읍들의 권리 강화
- ▶ 플랫폼 이용사업자,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의 분쟁조정을 위한 불공정 상담센터 설립
- ▶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거버넌스 구축

2. 골목상권중심의 경제활성화

기존의 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와 SSM에 이어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를 출점하여 여전히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마저 창고형 쿠팡머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통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을 제한하고 골목상권 단위의 경제지원정책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함.

- ▶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사전 협의
- ▶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점포 출점 시 상권영향조사 실시
- ▶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방지
-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하여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을 확대
- ▶ 골목형 상점가 조례개정을 통한 지정요건 완화 및 자체 지원 확대
- ▶ 골목형 상점가 사전 준비 단계로서 골목상점가(골목상인회) 지원 육성
- ▶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동 유통물류센터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지원
- ▶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발행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3.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은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은 2026년 시행 예정이고 상병수당제도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장할 예정. 이에 사회안전망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자체 상병수당 제도 도입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확대

4. 디지털 스마트화 전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플랫폼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플랫폼에 진입하더라도 기존 대기업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매출 대비 소득의 저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지원기구를 통한 디지털·스마트화 지원
- ▶ 소공인들을 위한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 향상
- ▶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스마트 공동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디지털 / 스마트화, 디지털 경영, 인프라 구축 교육 사업 시행
- ▶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공공 플랫폼 입점을 위한 디지털 매니저 지원
- ▶ 지역 화폐와의 연계를 통한 공공 플랫폼 활성화

5. 정의로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인원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하락과 더불어 대기업의 중소상인 분야 침탈로 인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 이에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무사히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절실

- ▶ 정의로운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
- ▶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와 공병 의무 수납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및 자원재활용업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재활용 스테이션 구축
- ▶ 대기업의 자원재활용업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

토론 5

토론문

이승훈

해우소포럼 회장

토론문

이승훈 해우소포럼 회장

memo

memo

토론 6

토론문

정의경

중기부 손실보상과 과장

토론문

정의경 중기부 손실보상과 과장

memo

memo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